

정 책 권 고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정 책 권 고 문

(공론화 추진결과)

2020. 7. 29.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생활폐기물 감량 실천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정 준수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과학적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인천광역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되, 입지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정하기를 권고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매립지 입지지역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입지지역 주민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0.7.29.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원 혜 옥	부위원장	김 학 린
위원	신 은 호	위원	김 미 경
위원	고 존 수	위원	김 일 회
위원	조 선 희	위원	김 영 구
위원	김 철 홍	위원	홍 선 미
위원	채 중 현	시민참여단 292명, 청소년참여단 17명	

※ 당면직 위원 3명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에 의거 회피함.

□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 권고

1.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 신규설치」 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 시민참여단의 56.5%가 '기존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대규모의 광역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는 사전조사 결과 대비 21.6%p 증가한 결과입니다.

○ 특히, '기존 광역시설 현대화'에는 93.5%의 시민참여단이 찬성의견을 주신데 반해 '기존 광역시설은 폐쇄하고, 각 군·구별 자체 처리시설 확보'는 6.5%로 사전조사 대비 약 49% 감소하였고,

광역소각시설이 있는 연수구 및 서구 등의 시민참여단 역시 각각 18.8%에서 3.1%로, 20.9%에서 9.3%로 크게 감소한 바, '기존 광역시설의 현대화'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바, 용역의 법적, 과학적, 검토과정에서 동 권고안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권고합니다.

○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93.5%의 시민참여단에서 '자체매립지 조성'에 동의하였으며, 사전·사후조사 결과 모두 동의율이 90% 이상이었습니다.

○ 다만, 시민인식(여론)조사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지도가 37.9%에 불과했고, 75.2%였던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 동의율이 공론숙의과정을 거치면서 93.5%로 증가했다는 점, 또한 군구

별 편차가 최대 25%p에 이른다는 점에서 매립지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등의 행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 선정시, 「입지후보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조사」를 거쳐 선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방법에 대해 64%의 시민참여단에서 입지후보지 조사용역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선정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 이는 공론숙의과정을 통해 14%p가 증가한 결과로, 공모가 아닌 용역을 통해 객관적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후보지 조사에서 최종 선정까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되, 주민참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4.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평가항목 중,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를 권고합니다.

○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중 시민참여단에서는 '주변지역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조성 시 환경훼손 정도', '매립지 면적 및 용량', '도로 및 교통여건',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다만, 5개 항목 모두가 10점 만점 중 8점대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론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중요도가 상승한 만큼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평가항목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함께 권고합니다.

5.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및 주민감시체계 구축」을 함께 권고합니다.

○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들이 갖는 우려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악취 및 분진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가장 필요하다는데, 72.6%의 시민참여단께서 동의하셨습니다.

○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주민감시체계 구축’은 22.6%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는 공론숙의 과정을 통해 사전조사보다 7.2%p가량 상승한 것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경정보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6.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지역 주민에게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입지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33.6%, 도로·공원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25.3%,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20.2% 순으로 가장 필요한 보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특히,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도로·공원 등 생활인프라 구축’은 각각 4.8%p, 4.1%p 증가한 바, 분임토의에서 제안된 세금 감면 등의 방안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생활인프라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되기를 권고합니다.

□ 정책제언

○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생활폐기물 발생 감소’와 ‘배출 수거체계의 개선’입니다. 관련 정책 추진 시 시급성 정도를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행동수칙 중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규정 준수’가 가장 중요한 행동수칙으로 판단되는 바, 분리배출 규정을 준수가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자체매립지에는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을 중단하고 100% 소각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89.7%가 동의하셨습니다.

- 특히 숙의과정 전과 비교했을때 14%p 상승한 결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반입할 수 있는 반입규정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합니다.

□ 추가의견

○ 공론화는 특정사안에 대해 여럿이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여 그 사회의 공적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시민인식 조사 결과, 이번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취지에 대한 공감도는 조사대상 3,000명 중 79.1%가 공감하셨습니다.
- 또한,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1차로 선발된 시민참여단 400명 중 368명(92%)이 권역별 공론장에 참석해 주셨고, 이 중 2차로 선발된 303명의 시민참여단 중 292명(96%)이 시민대공론장에 참석해 주실 만큼 이번 공론화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관심과 의지가 높았습니다.

○ 공론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 공론화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관련 전문단체를 통해 추천받아 구성했었고, 안건 의결시 표결이 아니라 합의 방식의 결정을 진행했습니다.
- 또한,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구성 시 참여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위해 임의 선발이 아닌, 표본추출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발하였으며, 특정지역 의견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견을 동일하게 존중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참여자간의 평등성 유지했습니다.
- 이러한 원칙하에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찰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 그 결과 이번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는 결과 수용성 여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단의 86.6%가 긍정 응답을 함으로써 성숙한 시민 공론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 공론화는 그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 앞서 인천시민 전반의 뜻을 찾아가는 의사수렴의 과정이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메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